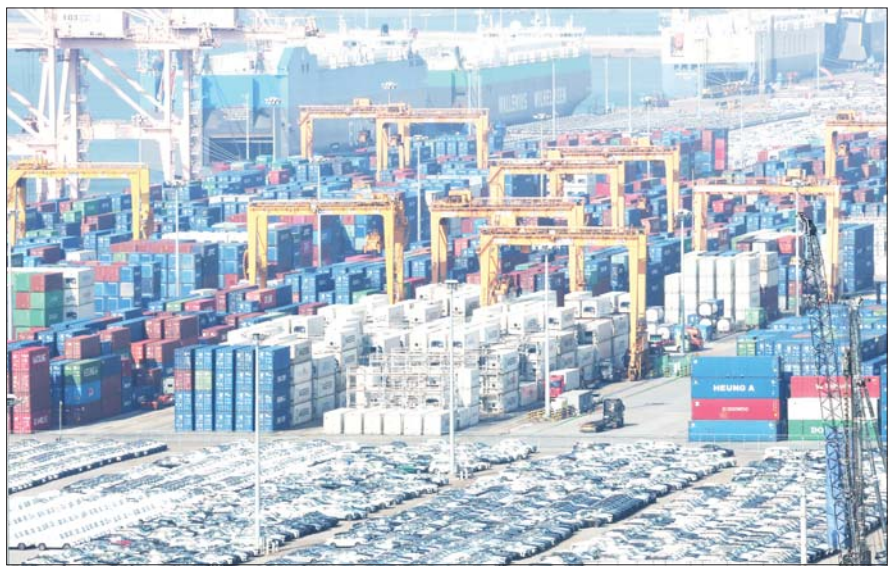
“경공업서 첨단산업으로… 반도체 이을 성장동력 찾아야”

수출 신화 그 이후

62년 만에 수출 규모 1만배 성장
기술력으로 자원·내수 한계 극복
반도체·대기업 쏠림 해소가 관건
소부장 상생·지역 일자리 창출
수출 다변화로 지속 성장 모색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이며 새로운 ‘1조 달러 수출국’이 나온 것은 2007년 중국 이후 19년 만이다. 사진은 지난 16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한국 경제가 연간 수출 1조 달러라는 역사적 고지에 올라서며 세계 무역사의 새 페이지를 썼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이후 62년 만에 수출 규모가 정확히 1만 배로 팽창했다. 1948년 수출 통계 집계 이후 올해 1~8월까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3만6509배로, 전 세계 주요 수출국 중 압도적 1위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불리한 조건을 딛고 일궈낸 기적이라는 점에서 평가가 남다르다. 앞서 1조 달러를 돌파한 독일(2006년), 미국(2006년), 중국(2007년)은 풍부한 부존자원이나 거대한 내수 시장,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인구 5160만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1조8820억 달러, 수입액 중 에너지 비중이 19.0%에 달하는 자원 빈국이라는 한계를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만으로 돌파했다. 달성 시점 역시 2000년대 중반 세계화 확산기에 1조 달러를 달성한 기존 국가들과 달리,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세계무역 분절화’ 시기에 이뤄낸 값진 성적표다.

수출의 질적 변화도 뚜렷하다. 수출 1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던 1977년 당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선박을 제외하면 냉동어류, 합판, 의류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산업 고도화를 거듭한 결과, 올해는 반도체(전체 수출의 32.6%)와 컴퓨터 부품(9.5%), 석유제품(6.1%), 승용차(6.0%) 등 첨단 제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정한 ‘AI 구현 제품’의 글로벌 핵심 공급기지로 도약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수출 성장의 온기가 특정 대기업이나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올해 1~10월 비수도권의 수출 성장 기여율은 44.9%로 2024년(23.2%) 대비 두 배 가까이 뛰며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날(18일) 백브리핑에서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기쁘지만, ‘반도체의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크다”며 “호실적에 취하지 말고 대기업·반도체 쏠림과 양극화, 통상 리스크를 냉정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반도체·석유제품 등 특정 주력 품목의 단가 변동성과 대기업 쏠림 현상에 따른 체감 경기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석유제품은 단가 상승과 공급망 구조 특성상 대기업 편중이 두드러지고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 국민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 강 실장은 “공급망이 긴 조선·자동차의 물량 확대와 고부가가치화, 용인 트리니티 팹 등 국내 투자를 통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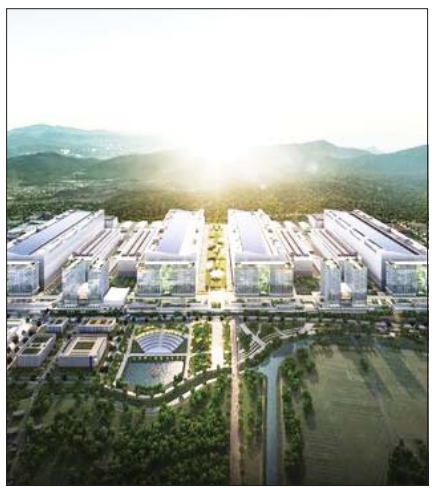
수입 관리와 통상 외교의 정교화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1~10월 수입이 전년 대비 21% 늘어난 6351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원유·나프타·핵심광물·반도체 장비 등 안정적인 수입이 뒷받침됐기에 수출 확대도 가능했다. 강 실장은 “수출 1조 달러의 한 축은 안정적 수입”이라며 “희토류·첨단장비 수출통제 리스크에 대비하는 한편, 대미 무역흑자 확대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해 전략적 해외 투자와 국내 ‘마더팩토리(R&D·핵심 생산기지)’ 유지·강화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전망 역시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단가·유가 안정화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연 가능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철강·석화 등 공급과잉 품목의 경쟁 심화가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AI 시대에 맞춘 전력기자재·비철금속 등 연관 품목과 K-뷰티·식품 등 소비재, 방산·원전·가스터빈 및 서비스·지재권 수출까지 외연을 넓혀 수출 1조 달러 시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수출 1조달러 시대… SK하이닉스, 소부장과 반도체 동반성장

HBM 성공 기반으로 협력 확대
용인 공동 기술검증 시설 구축
연구개발부터 양산까지 지원



SK하이닉스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동 테스트 시설 ‘트리니티 팹’ 구축 등 협력사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부터 양산까지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19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국내 반도체 수출액은 3983억9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2.8%를 차지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가 국가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5.6%에서 지난해 24.4%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 40%를 넘어섰다. 지난 10월에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57.5% 증가하며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확대의 주요 동력으로는 HBM이 꼽힌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지만 당시에는 수요가 제한적이고 생산 비용이 높아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연구개발을 이어가며 독자적인 MR-MUF 공정으로 방열 성능과 생산성을 개선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생성형 AI 확산과 맞물려 성과로 이어졌다.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자 SK하이닉스는 앞서 확보한 HBM 3 양산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에 대응했다. 이후 HBM3E와 HBM4를 거쳐 HBM4E 샘플 공급까지 이어가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 개발 범위도 HBM을 넘어 확대됐다.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6세대(1c) DDR5와 321단 낸드플래시를 개발한 데 이어 올해 AI 서버용 저전력 D램 모듈인 SOCAMM2 양산에 나섰다.

회사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는 국내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이 뒷받침됐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연결하는 구조로, 제조 과정에서 정밀한 공정 제어와 첨단 패키징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기술력도 제품 성능과 생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동 테스트 시설인 ‘트리니티 팹(Trinity Fab)’을 구축하고 있다. 약 1000평 규모의 클린룸에 총 55대의 장비를 갖추고 2027년 5월 가동할 예정이다.

시설 구축에는 기획 단계부터 217개 소부장 기업의 수요가 반영됐다. 협력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양산 수준의 공정 환경을 제공해 신기술 검증 비용과 개발 기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시설은 장비 유지·보수와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함께 협력사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R&D 도전보상제’와 ‘기술혁신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분석·측정 지원센터에서 첨단 장비를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공급망 강화보증과 납품대금 지원 펀드로 협력사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청년 채용 프로그램과 반도체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인력 확보도 지원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국토부·서울시 5개월 만에 합의… 서울 1.6만가구 공급 길 열렸다

도심복합사업 8곳 추진에 뜻 모아
용적률 완화 범위는 추후 결정
일조권·교통 등 사업지별 검토

용적률 완화 범위를 놓고 대립해 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5개월 만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협의를 재개해 서울 8개 사업지의 사업 추진에 이견이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 확대 여부 등 구체적인 용적률은 개별 사업지의 일조권과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통합심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실제 이번 협의 대상인 신길15구역은 기존 기준의 약 1.1배 수준인 용적률 330%를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할 자치구 등은 전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를 열고 서울 시내 8개 사업지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당초 지난 6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협의체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으로 수차례 연기됐다가 약 5개월 만에 열렸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중구 약수역 인근, 성북구 장위12구역, 도봉구 수유12구역, 중랑구 상봉터미널,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신길15구역, 강동구 고덕역 인근 등 8개 사업지, 총 1만5993가구 규모의 사업계획이 논의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성 개선을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1.2배 범위를 기준으로 일조권과 교통·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사업지별 설계안과 주변 여건을 검토해 통합심의에서 최종 용적률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전기획협의체에서 8개 사업지의 최종 용적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급이 중요하다고 해도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사업지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일조권과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용적률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조권은 사업지 내부뿐 아니라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향후 통합심의 과정에서 일조 시뮬레이션과 교통 여건 등을 살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 대상 가운데 신길15구역은 용적률 약 330%를 적용한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용적률은 기존 기준의 약 1.1배 수준으로, 사업시행자 측이 지난해부터 마련해 온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길15구역은 이미 지난해부터 용적률 330%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적정한 밀도와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길15구역의 용적률 330% 역시 최종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서울시는 향후 통합심의에서 일조권과 교통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최종 용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길15구역은 설계가 상당 부분 마무리돼 통합심의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상태다. 다음 달 통합심의 개최가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7개 사업지는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통합심의에 상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지가 설계안을 마련하면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과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게 된다.

LH도 이번 협의체에서 8개 사업지의 사업 추진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용적률은 향후 통합심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이현진 기자 lhj@